

2017도1574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김재형)은 2018. 2. 13. 피고인 박OO 외 4명에 대한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, ① 피고인 박OO 외 3명이 2015. 10. 3.자 정당 단합대회에서, ② 피고인 박OO 외 1명이 2015. 9. 21.자 피고인 이OO의 자택에서 각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7도15742 판결)

1.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

■ 공소사실의 요지

- 피고인 박OO는 자유한국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임
- ① 피고인 박OO 외 3명은 2015. 10. 3. 홍성군에 있는 용봉산에서 새누리당 당원 단합대회 명목의 행사를 개최하였음. 위 피고인들은 행사 직전에 입당처리된 당원과 비당원이 다수 포함된 선거구민 약 750명을 행사에 참석하게 하였고, 행사장에서 축사를 맡은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□□ 등이 피고인 박OO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박OO를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음
- ② 피고인 박OO, 이OO는 2015. 9. 21. 피고인 이OO의 자택에서 목천읍 자유총연맹 회원 12명 등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다음 피고인 박OO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, 피고인 이OO는 참석자들에게 식

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음

■ 소송 경과

- 원심: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기각 [위 ①, ② 공소사실 ➡ 모두 유죄, 피고인 박OO: 벌금 300만원, 나머지 공소사실¹⁾ ➡ 무죄)
- 피고인들이 상고 제기

2. 대법원의 판단

■ 사건의 쟁점

- ① 2015. 10. 3. 단합대회와 관련하여, 피고인 박OO 등의 행위가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,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, 공소사실이 인정 되는지 여부 등
- ② 2015. 9. 21. 자택모임과 관련하여, 피고인 박OO 등의 행위가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, 피고인 이OO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

■ 판결의 결과

- 상고 기각

■ 판단의 근거

- 2015. 10. 3. 단합대회와 2015. 9. 21. 자택모임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행위의 명목과 시기, 장소,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
- 2015. 10. 3. 단합대회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피고인 박OO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

3. 판결의 의의

■ 대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(권OO 전 대전시

1) 상고심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를 생략함

장 사건)에서 선언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임